

[데이터 경제 시대의 도래, 기업이 대비해야 할 주요 법안서]

10차시. 개인정보침해시 구제방법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습내용: 해당 차시에서 학습할 학습주제(목차)를 제시해 주세요.▪ 학습목표: 해당 차시 학습을 통해 <u>학습자들이 달성해야 할 목표</u>를 학습내용과 연계하여 작성해 주세요.

▶ 학습내용

1. 개인정보침해 구제방법과 관련 벌칙
2. 과징금
3. 손해배상책임
4.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5. 개인정보단체소송

▶ 학습목표

1.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구제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2. 개인정보침해 관련 벌칙을 설명할 수 있다.
3. 구체적 사례를 통해 과징금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4. 손해배상제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학습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내용의 위계 파악을 위해 일관성 있는 번호 체계로 작성해 주세요.

I. 개인정보침해와 구제방법의 의의

21세기 환경의 대표적인 변화는 바로 ‘디지털세상’으로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인공지능(AI)과 결합한 디지털혁명은 급기야 제4차 혁명으로까지 명명되면서, 많은 정보들의 압축을 통한 저장과 공유의 대량화와 신속화를 넘어서 이제는 개인정보를 활용한 맞춤형서비스까지 제공됨에 따라 개인정보의 활용은 이제 무궁무진하게 되었다. 이처럼 개인정보를 활용한 디지털서비스는 서비스제공자측인 산업계에서도 괄목할만한 성장을 안겨주기도 하지만, 정보주체인 개인에게도 상상을 뛰어넘는 편리함과 시간의 단축을 제공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의 사회적·경제적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오·남용의 위험이 커지게 되고, 실제 크고 작은 개인정보 침해사례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발맞춰 데이터 3법에서는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범위를 확대함과 동시에 개인정보침해시 벌칙 및 과태료, 손해배상의 전통적인 법적 효과 외에도 징벌적 손해배상, 법정손해배상, 과징금, 단체소송,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다양한 구제방법을 마련하였다. 전통적인 법적 구제방법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II. 벌칙

제10장 벌칙	
제70조 벌칙 제71조 벌칙 제72조 벌칙 제73조 벌칙	제74조 양벌규정 제74조의2 몰수 · 추징 등 제75조 과태료 제76조 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개인정보 오남용시 정보주체의 민감함 사생활을 침해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동법에 위반하였을 때 가장 강력한 제재로 최대 10년까지의 형사처벌을 마련해둠과 동시에 과징금 및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0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벌칙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형사처벌

먼저 가장 강력한 법적 제재방법인 형사처벌에 대해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제70조부터 제73조에서 징역 또는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형사처벌이 적용되는 위반행위는 바로 범죄행위로 간주된다. 이러한 개인정보 관련 범죄행위의 불법의 정도는 전체 네 단계로 구성된다. 첫 번째로 가장 무거운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제70조), 두 번째로 무거운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제71조), 세 번째로 무거운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제72조), 네 번째 가장 가벼운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제73조).

1)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해당 위반행위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에서는 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하여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의 중단·마비 등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또는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이를 교사·알선하는 자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2)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당 위반행위

두 번째 중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동법 제7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즉,

1.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항 제2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2.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제1항·제2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제한),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5항, 제27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제3항 또는 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3.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1항을 위반하여 민감정보를 처리한 자
4.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1항을 위반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한 자
- 4의2. 제28조의3(가명정보의 결합 제한)을 위반하여 가명정보를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제공받은 자
- 4의3. 제28조의5(가명정보 처리 시 금지의무 등) 제1항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한 자
- 4의4.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2항(제27조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자와 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을 위반하여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제38조 제2항에 따른 열람등요구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포함)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 4의5. 제39조의3(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에 대한 특례) 제1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 4의6. 제39조의3 제4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5. 제59조(금지행위) 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6. 제59조(금지행위) 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

이러한 위 각호에 해당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두 번째로 중한 형사처벌(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게 된다.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당 위반행위

다음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에서는 다음의 행위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제5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 기능을 사용한 자
2. 제59조(금지행위) 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3. 제60조(비밀유지 등)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용한 자

4)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당 위반행위

형사처벌의 가장 낮은 단계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3조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1.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2항,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3항,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제6항, 제28조의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 제1항 또는 제29조(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
- 1의2.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제1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2.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2항을 위반하여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3.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처리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2. 양벌규정

위에서 살펴본 제70조 ~ 제73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실제 위반행위를 한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도, 제74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그 법인 또는 사용자인 개인도 처벌하고 있다. 이처럼 행위자가 아닌 법인이나 사용자인 개인도 같이 처벌하는 이유는 이러한 법인이나 개인에게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지휘감독의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위자 외의 법인이나 개인이 행위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이러한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구체적으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첫째, 벌칙 제70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제74조 제1항), 둘째, 벌칙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도록(제74조 제2항) 규정하고 있다. 단,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는 입증을 하게 되면 이러한 양벌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3. 몰수와 추징

한편 2014년 1월 카드사측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같은 대형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빈발하게 되자 개인정보 보호법은 2015년 7월 24일 개정하여 악성 행위자에 대해서 보다 강력한 제재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에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자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제70조 각호)에 처하도록 한편,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유통 등으로 인한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나아가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제74조의2(몰수·추징 등)를 신설하여 제재수준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몰수 또는 추징은 다른 벌칙에 부가하여 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과태료

개인정보 보호법은 제75조에서 행정청이 부과하는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형사처벌 대상인 범죄행위에 비하여 비교적 사소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해 부과한다. 이러한 과태료는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2 범위에서 감경될 수 있고, 반대로 위반내용과 정도가 중한 경우에는 1/2 범위에서 가중될 수도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과태료 대상의 질서위반행위도 차등화하여 5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제75조 제1항),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제75조 제2항),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제75조 제3항) 그리고 마지막으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제75조 제4항)으로 나누어 부과하고 있다.

과태료는 동법 시행령 제63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른 별표 2에서 상세히 부과기준을 마련해두고 있다. 한편 이러한 과태료 적용시, 동법 제34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과태료와 과징금은 법적 성격이 다르지만 두 제재가 모두 금전적 제재라는 점에서 당사자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원칙을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III. 과징금

1. 의의

과징금이란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 또는 개인에게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 또는 면허의 취소나 정지처분에 대신하여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를 말한다. 이러한 과징금은 일반적으로는 경제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가 위반행위를 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얻을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부과되는데, 금전적 제재라는 점에서는 벌금이나 과태료와 유사하지만, 과징금 수입을 징수분야의 행정목적에 직접 사용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금액이 월등히 크다는 점에서 벌금 등과 구별된다. 이러한 과징금은 원칙적으로 개별법에 따라 징수하며, 추후 체납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이나 지방행정제재·부과 등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게 된다. 그리고 과징금은 행정처분의 하나이므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거쳐서 행정소송으로 가기도 하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직접 행정소송을 할 수도 있다고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이러한 과징금 제도를 2013년 8월 6일에 제34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에 신설하였으며, 특히 데이터 3법 개정예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는 2020년 2월 4일에 제39조의15(과징금의 부과 등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였다.

2. 과징금 부과 대상

1) 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처리하는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4조 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물론 보호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할 때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1.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이행 노력 정도, 2.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주민등록번호의 정도, 3.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 이행 여부를 고려하여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제34조 제2항).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과징금을 낸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법 제34조 제3항),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 내에 과징금 및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법 제34조 제4항).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과징금부과의 특례

나아가 보호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주요규정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법 제39조의15 제1항). 이러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과 비슷한 규모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으며,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1. 영업을 개시하지 않았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등의 사유로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또는 2. 재해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는 등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시행령 제28조의11 제2항)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4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법 제39조의15 제2항).

또한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며(법 제39조의15 제5항),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과징금과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법 제39조의15 제6항)

3) 과징금 부과 기준

과징금은 법 제28조의6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종합하여 제2호 가목에 따라 산정된 기준금액에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필수적 가중·감경,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추가적 가중·감경을 거쳐 산정하며,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28조의6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상한을 넘어서는 안된다.

가. 기준금액 산정

기준금액은 시행령 제29조의6 제1항에 따른 전체 매출액에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 과징금의 산정비율(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¹⁾

위반행위의 중대성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1천분의 27
중대한 위반행위	1천분의 21
일반 위반행위	1천분의 15

또한 위의 금액에도 불구하고 1. 영업을 개시하지 않았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등의 사유로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또는 2. 재해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는 등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시행령 제29조의6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기준금액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반행위의 중대성	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3억 6천만원
중대한 위반행위	2억 8천만원
일반 위반행위	2억원

나. 필수적 및 추가적 가중·감경

이때 위반행위의 기간과 횟수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해야 하며(필수적 가중·감경),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 정도,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의 협조 여부, 위반행위의 주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중·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추가적 가중·감경).

다. 세부기준

한편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 기준, 필수적 가중·감경 및 추가적 가중·감경을 위한 세부기준, 부과과징금의 결정을 위한 세부 기준과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시행령 [별표 1]).

3.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에 따른 과징금

1) 기본 산정기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법 제34조의2 제1항), 보호위원회의 과징금 부과기준은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다.

위반정도	산정기준액	비고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3억 5천만원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10만건 이상의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이하 “분실 등”이라 함)된 경우
중대한 위반행위	2억 3천만원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10만건 미만의 주민등록번호가

1)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별표 1] 가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제29조의6 제4항 관련)

		분실 등이 된 경우 및 경과실로 인하여 10만건 이상의 주민등록번호가 분실 등이 된 경우
일반 위반행위	1억원	경과실로 인하여 10만건 미만의 주민등록번호가 분실 등이 된 경우

2) 1차 및 2차 조정

한편 이러한 과징금은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이행 노력 정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 등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 이행 여부를 고려하여 산정기준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하며(1차 조정),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 협조여부, 위반행위에 따른 추가적 피해 발생 여부, 평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차 조정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한다(2차 조정).

4.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과징금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아래와 같은 주요 위반행위(법 제39조의15 제1항 각호)를 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법 제39조의15 제1항).

1. 제17조(개인정보제공) 제1항·제2항,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제1항·제2항 및 제19조(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제공한 경우
2.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제6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3.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1항 제1호(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민감정보를 수집한 경우
4.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4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에 따른 관리·감독 또는 교육을 소홀히 하여 특례 수탁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한 경우로서 제29조의 조치(내부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
6. 제39조의3(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에 대한 특례) 제1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7. 제39조의12(국외 이전 개인정보의 보호) 제2항 본문(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에 제공한 경우

그리고 동법 제1항에 따른 이러한 과징금 부과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매출액 산정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과 비슷한 규모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으며,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4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법 제39조의15 제2항).

이때 보호위원회는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를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며(법 제39조의15 제3항), 구체적

인 산정기준과 산정절차는 동법 시행령 제48조의11 제4항에 따라 정한다. 시행령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 및 절차들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기준 금액의 산정

가. 기본 산정기준 기준금액은 동법 시행령 제48조의11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에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 과징금의 산정비율(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위반행위의 중대성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1천분의 27
중대한 위반행위	1천분의 21
일반 위반행위	1천분의 15

나. 기준금액 제48조의11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기준금액을 다음으로 한다.

위반행위의 중대성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3억 6천만원
중대한 위반행위	2억 8천만원
일반 위반행위	2억원

다. 고의·중과실 및 영리목적 등 위반행위의 중대성은 고의·중과실여부, 영리목적의 유무, 위반행위로 인한 개인정보의 피해규모, 개인정보의 공중에 노출 여부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 필수적 및 추가적 가중·감경

위반행위의 기간과 횟수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해야 한다(필수적 가중·감경).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 정도,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의 협조여부, 위반행위의 주도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추가적 가중·감경).

3) 부과과징금의 결정

한편 추가적 가중·감경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 위반행위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나) 위반행위로 발생한 정보주체의 피해 및 배상의 정도 등에 따라 해당 금액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또한 가) 위반행위자의 지급불능·지급정지 등의 사유로 위반행위자가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낼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가 경미한 경우 등에 따라서는 산정된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IV. 손해배상책임

1. 일반 손해배상책임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

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법 제39조 제1항). 이때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1. 개인정보처리자의 위법행위, 2. 위반행위로 인한 정보주체의 재산(경제적) 또는 비재산적(정신적) 손해발생, 3. 개인정보처리자의 위반행위와 정보주체의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4.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존재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위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했음은 주장하는 정보주체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이때 입증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위반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인데 이러한 인과관계의 정도는 상당인과관계로 이해되어,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이 과학적인 입증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경험법칙상의 통상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법 제39조 제1항 후단). 이러한 조문의 내용은 앞서 보았던 정보주체의 입증책임을 개인정보처리자로 전환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입증의 전환은 현실적으로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울 수 밖에 없는 약자적 지위에 있는 일반 시민의 지위를 인정하여, 정보주체는 손해배상청구시 상당인과관계 정도로 입정하되, 원고측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고의·과실에 대한 입증을 부담시켜서 정보주체의 피해구제를 보다 원활히 도모한 것이다.

2. 징벌적 손해배상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로서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2015년 7월에 신설하였다(법 제39조 제3항). 이처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회적인 큰 악영향을 초래한 경우 일반적인 손해배상액을 넘어서 보다 강력한 손해배상인 3배의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것을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이라고 한다. 개인정보유출은 이제 개인에게는 물론이고 사회에도 엄청난 악영향을 끼치므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산업계에 상징적으로 관리감독의 최선을 다하도록 강력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묻는 경우, 법원은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 규모, 3. 위반행위로 인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6. 개인정보처리자의 재산상태, 7.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 후 해당 개인정보를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8.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를 고려하여 배상액을 정하여야 한다(동법 제39조 제4항).

3. 법정손해배상

개인정보보호법은 앞서 살펴본 일반적 손해배상책임(제3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법 제39조의2 제1항). 이처럼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법정손해배상제도를 2015년 7월에 징벌적 손해배상(법 제39조 제3항)과 함께 도입하였다. 법정손해배상제도도 징벌적 손해배상과 마찬가지로 개인정보처리자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서, 정보주체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이때 법원은 법정손해배상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

를 고려하여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으며(법 제39조의2 제2항), 일반적인 손해배상(제39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정보주체는 사실심(事實審)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그 청구를 법정손해배상에 따른 청구로 변경할 수 있다(법 제39조의2 제3항).

법정손해배상 책임에 있어서도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법 제39조의2 제1항 후단). 이는 일반 손해배상에서 입증책임이 전환된 것(법 제39조 제1항 후단)과 마찬가지로 법정손해배상에 있어서도 입증책임이 정보주체에서 이제는 개인정보처리자로 전환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4.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

앞서 살펴본 정보주체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무한정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행사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통상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기준에 준한다. 즉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인지했음도 그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민법 제766조 제1항). 이에 따라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위법행위로부터 자신의 개인정보와 관련한 피해를 인지한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하며, 나아가 이러한 손해배상청구권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경과시 소멸한다.

V.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제7장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제40조 설치 및 구성 제41조 위원회 신변보장 제42조 위원회 제척 · 기피 · 회피 제43조 조정의 신청 등 제44조 처리기간 제45조 자료의 요청 등	제46조 조정 전 합의 권고 제47조 분쟁의 조정 제48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49조 집단분쟁조정 제50조 조정절차 등

1. 의의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보다 신속한 구제를 위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함)가 마련되었다. 개인정보 유출 등의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가 워낙 방대하고 빈도가 높아 이를 모두 법원에서 해결하려고 하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모두 비효율적이다. 이에 따라 법원에서 사법적 판단을 받기에 앞서 양 당사자들의 원만한 해결, 즉 분쟁의 조정(調停)을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가 등장한 것이다.

2. 구성 및 운영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사건의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부를 둘 수 있고, 이대 조정부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위임받아 의결한 사항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법 제40조 제6항).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석으로 의결한다(법 제40조 제7항).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44조 제1항). 물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조정의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분쟁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법 제45조 제1항) 그리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분쟁당사자나 참고인을 동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그 의견을 들 수 있다(법 제45조 제2항).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제시하고 조정의 수행 전에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법 제46조). 그리고 분쟁의 성질상 동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이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법 제48조 제1항 1문).

3. 조정의 효력

한편 당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내용을 수락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 확정판결, 즉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법 제47조 제5항). 먼저 당사자가 조정내용을 수락하면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고, 동 위원회의 위원장과 각 당사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법 제47조 제4항).

만일 조정의 성립에도 불구하고 동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각종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조정조서 등에 대한 집행문 부여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1768호)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정이 원만히 성립되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인정되면 기판력이 발생하여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다룰 수 없다.

VI. 개인정보단체소송

1. 의의

오늘날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대량으로 피해사고가 발생하여 집단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필요성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로부터 '개인정보 단체소송'이 도입되었다(법 제51조).

참고로 이러한 단체소송은 집단소송과 구별되는데, 단체소송의 경우 자격을 갖춘 단체로 하

여금 전체 피해자들의 이익을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인 반면에, 집단소송은 피해집단에 속해있는 개인에게 당사자적격을 인정하여 그로 하여금 집단구성원 전원을 위해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 단체소송의 대상과 청구범위 및 원고적격

먼저 개인정보 보호법은 동법 제51조(단체소송의 대상 등)에서 소비자단체 또는 비영리민간 단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동법 제49조(집단분쟁조정)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분쟁조정의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에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송(이하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단체소송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행위는 동법의 위반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정보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개인정보단체소송의 청구범위는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중지이므로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 청구는 개인정보단체소송을 이용해서는 청구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 만일 정보주체가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3. 확정판결 효력

개인정보 보호법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는 동법 제51조(단체소송의 대상 등)에 따른 단체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그러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청구기각판결이 확정되어도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다른 단체도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즉 1.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안과 관련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기관에 의하여 새로운 증거가 나타난 경우, 2. 기각판결이 원고의 고의로 인한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단체소송제기가 가능하다.